



## 건설교통부, 부실건설업체 퇴출 본격화 시·도별 부실건설업체 규모와 처리 방향



건설교통부는 부실건설업체에 대한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건설업 진입기준을 강화하여 부실업체의 시장퇴출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일반건설업체의 경우 올해말 800개 업체를 퇴출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6월말 700개, 내년말 1천개 등 총 2천500개 업체를 퇴출시킬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각 지방별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부실업체들이 속속 밝혀져 퇴출이 줄어 이을 것으로 보인다. [편집자 註]

■ 부산광역시

부산시는 2천179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1차로 898개(일반 117, 전문 781)를 적발하여 현장조사를 마치고 현재 청문을 벌이고 있다. 청문대상업체는 796이고 연락두절 또는 기술자 이중등록 등 현장조사 대상업체는 82개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12월 15일까지 청문을 마치고 올 연말까지 위반 유형별로 보완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인천광역시

인천시는 인천지역 내 전체 2천847개(일반 256, 전문 2천591)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하여 부실우려업체로 판명된 597개(일반 56, 전문 541)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인천시는 1차 조사에서 현장실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명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기술자 이중등록, 소재지, 대표자 동일업체, 경력임원 자료 미제출 등에 대해서도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 경기도

경기도는 도내 5천101개 업체 가운데 43%인 2천196개 업체가 등록기준에 미달인 것으로 밝혀졌다.

기준미달 업체의 유형은 자본금 부족이 764개, 보유기술자 부족이 860개, 출자좌수 부족이 486개, 경력임원 부족이 39개, 기타가 47개로 나타났다.

■ 충청북도

충청북도는 도내 건설업체 가운데 25.3%가 자격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퇴출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충청북도는 실태조사 결과 일반 69개, 전문 602개 등 총 671개 업체가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되거나 기술자 및 경력임원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는 등 등록기준에 미달된 부실업체로 판정을 받았다. 이는 충청북도 내 전체 건설업체 2천655개 가운데 25.3%를 차지하는 숫자이다.

등록기준 미달업체를 유형별로 보면 자본금 미달이 219개, 기술인력 부족이 290개, 장기휴·폐업이 95개, 조합출자증권 부족이 52개, 경력임원 미보유가 15개 등으로 나타났다.

■ 제주도

제주도는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도내 189개 부실업체들에 대해 등록취소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제주도는 모두 602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 조사를 벌인 결과 189개(일반 26, 전문 163) 부실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기술자 부족이 86개, 자본금 부족이 74개, 대표자 동일이 18개, 연락두절이 10개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밖에 37개 업체는 최근 2년간 공사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